

- 아산시 더 큰 시정위원회(생활안전분과) - 2019년 제1차 정기 분과회의 결과

I 개 요

- 일 시 : 2019. 3. 19.(화) 14:00 ~ 16:00
- 장 소 : 시청 중회의실
- 참 석 자 : 16명
 - 위 원(10) : 권영진, 김문천, 김미영, 박민웅, 이광열, 이용숙, 정옥식, 채훈섭, 윤권중(분과위원장), 자치행정과장(간사)
 - 관계공무원(6) : 행정팀장, 미세먼지대책팀장, 미디어팀장, 자치분권팀장, 정보기획팀장, 가로등팀장



II 주 요 안 건

- 2019년 생활안전 분야 주요 정책과제 설명 및 자문
 - ① 아산시 미세먼지 종합대책
- 민선7기 주요·부진 공약 설명 및 자문
 - ① 시민주도 「아산영상미디어센터」 운영
 - ②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 ③ 안전사각지대 CCTV 확대 설치
 - ④ 안전사각지대 보안등 확대
- 분과별 정책과제 개발 착수 협의(자체 토론)

Ⅲ

회의 결과

□ 정책과제 분야 주요의견

① 아산시 미세먼지 종합대책

- 미세먼지 배출 현황에 대한 지역 내 분석 및 적절한 대응 필요
ex. 공공기관 배출시설(생활자원처리장…), 기업체, 공사장 비산먼지, 영농 및 생활쓰레기 소각 등
- 미세먼지 정책 추진 관련 국·도비 확보 노력, 적절한 보상에 대한 정책적 차원의 접근 필요
- 조례 등 자체 규제를 통한 대중교통 친환경차 전환 시급

□ 공약 분야 주요의견

① 시민 주도 「아산영상미디어센터」 운영

- 실패 사례가 많은 만큼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해 구성된 콘텐츠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상

②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 생활안전 분과의 존재 이유가 지방자치를 준비하기 위함
- 가장 기본이 되는 읍면동 단위에서 시민 참여와 자기결정권의 보장 필요, 비교적 규모가 작은 송악 지역을 주민자치회로 전환 시도
- 아산시 대표자원인 은행나무길, 곡교천 주변 등의 종합계획에 대하여 전문기관과 함께 범시민적으로 논의 필요

③, ④ 안전사각지대 CCTV 및 가로등 확대

- 천안아산역 광장(와이시티 방향) CCTV 및 가로등 설치
- 지하시설물 등에서의 사건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전면적인 점검과 보안책 마련 필요

□ 기타 생활안전 분야 정책에 관한 의견(서면)

① 사람 중심의 교통시설 구축

- 횡단보도 안전 차단기, 대각선 횡단보도, 시내 전역을 연결하는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신호시간 연장버튼

② 교통체계 개선

- 아산·천안 택시 영업권 통합, 위급·긴급 교통시스템 구축(신호 연동 프리패스),

붙임 : 1. 회의록 1부.

2. 서면의견서 1부(별첨). 끝.

발 언 자	내 용
간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부터 아산시 더 큰 시정위원회 생활안전분과 2019년 제1차 정기 분과회의를 시작. • 먼저 윤권종 분과위원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음.
분 과 위 원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말씀) • 아산시는 GRDP, GDP가 전국 최고 수준. 맥킨지 보고서에서 2025년 세계 7대 부자도시에 아산을 포함. 기대감이 높고 역량도 갖추고 있는데 아산시가 선진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돕는 것이 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 특히, 도농복합도시로 시민 삶의 질의 편차가 매우 큼. 생활안전분과에서 지방차치, 거버넌스의 가치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것임.
간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격적인 회의 시작에 앞서 2019년 더 큰 시정위원회 운영계획 설명. (설 명)
간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어서, 생활안전 분야의 2019년 주요 정책과제인 아산시 미세먼지 종합 대책에 대하여 기후변화대책과 차창기 미세먼지대책팀장님 설명 바람.
미세먼지대책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약 설명)
분 과 위 원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 의견 요구)
이 광 열 위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협약을 맺은 4개 시군이 모두 동일한 사업을 하는지? 실질적으로 4개 시군이 미세먼지 관련 사업을 공동 추진해야 협약의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미세먼지대책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같은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음. 지자체 차원의 미세먼지 대응 정책은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시작하였음.
이 광 열 위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떻게 보면 우리는 피해를 보는 입장인데 서산, 당진 등에서 추진의지가 없다면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
미세먼지대책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자체의 문제보다는 서산, 당진 쪽 산업시설이 원인으로, 충남도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
분 과 위 원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적 문제, 지자체 간 협업에 관한 사항은 있으나 내부적인 문제가 덜 다루어진 것 같음.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쓰레기 소각장 등 공공 배출시설, 대기업 등에서의 내부적인 미세먼지 발생 현황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 필요. 또한, 소각장 운영에 있어 기압, 시간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 있음.
미세먼지대책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소각량을 20% 감축하고 있으며 오염물질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는 완전연소가 필수로 가동시기를 조정할 수 없는 어려움(가동중지 시 소각시설 온도가 일정치 않아 불완전연소 됨).
분 과 위 원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전연소와 미세먼지 발생과는 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함. 촉매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되어야 함.
미세먼지대책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 소각장 배출물질 확인 결과 배출허용 기준 대비 적게 배출하고 있음.
분 과 위 원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미동은 생활쓰레기만 취급하는데 산업폐기물 처리는?

발 언 자	내 용
미세먼지대책팀장	• 천안시 소재 민간인 소각장에서 처리.
분 과 위 원 장	• 신도시 등 개발지역 비산먼지 관리는?
미세먼지대책팀장	•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1명에 불과.
분 과 위 원 장	• 중국발 미세먼지의 원인이 산업, 가정용 연료(석탄), 소각 등인데, 시 자체에서 발생하는 부분도 있을 것임. 논·밭·생활쓰레기 소각, 그 중 비닐하우스 소각이 매우 심각하여 적극적인 시민 계도 필요. 등유 및 화목보일러 이용 가정에 대한 제한 또는 지원이 있는지?
미세먼지대책팀장	• 비닐하우스는 영농폐기물로 별도 수거. • 화목보일러는 제한할 수 없음. 순수 목재만 태우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생활쓰레기 등을 섞어 소각시켜 문제가 됨.
분 과 위 원 장	• 주민신고만으로 해결이 어려우니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 • 지역 내에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력을 세부화 할 것을 제안.
미세먼지대책팀장	• 단속보다는 인식 개선이 중요.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계도를 강화하겠음.
분 과 위 원 장	• 홍보·계도 시스템 강화 필요.
채 훈 섭 위 원	• 미세먼지 발생 농도가 천안보다 아산이 높아 충격적.
미세먼지대책팀장	• 미세먼지 발생 현황에 대하여는 분석했으나, 그 원인은 아직 찾을 수 없었음.
박 민 응 위 원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2022년까지 1,100억 원 투입 예정이라고 했는데, 의도치 않게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하여 자체예산으로만 대응하는 건 불합리. 미세먼지 정책 추진을 위한 국·도비 지원이 필요.
미세먼지대책팀장	• 실제로 석탄화력발전소의 50% 이상이 충남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력은 수도권에서 사용, 피해는 충남도민의 몫. • 4개 시군이 공동과제를 모색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 수소버스 시범도시도 같은 논리로 접근하여 선정됨.
분 과 위 원 장	• 지방정부 시대에 미세먼지 문제는 매우 중요. 대한민국이 탄소배출권에 가입되어 있으나 국내에서는 거래 등에 관한 규제나 지원책이 없음. 충남에서 수도권 전력의 80%를 생산하고 있으니 적절한 보상에 대한 정책적 차원의 접근이 반드시 필요.
분 과 위 원 장	• 유럽에서는 SUV 경유차 운영을 엄격히 제한(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대중교통 분야에 경유차가 남아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빠른 시간 안에 전환되어야 함. • 지방정부가 조례로 제한할 수 있는지, 자체 규제 방안 검토 필요.
간 사	• 다음은 민선7기 주요·부진 공약 설명 건입니다. 개별적으로 설명하기 보다는 4개 공약을 일괄 설명드리고 건별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지?
위 원 모 두	• 동의함.

발 언 자	내 용
분 과 위 원 장	• 앞은 자리에서 편하게 간단하게 설명 바람.
간 사	•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건부터 편안하게 설명 바람.
미 디 어 팀 장	• (시민 주도 아산영상미디어센터 운영 공약 설명)
분 과 위 원 장	• 시민들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목표인데, 전문가 및 시민·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각각의 공간과 R&D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미 디 어 팀 장	• 철저하게 시민 위주 문화공간임. 아산시 평균연령이 38.6세인데, 모 기업에서 스마트 미디어 활용도에 대한 연구 조사결과 20대보다 30~40대의 활용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전문영역보다는 시민 교육, 동아리 연계 참여 등 시민 영역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
분 과 위 원 장	• 충남, 천안의 센터와는 어떻게 다른지?
미 디 어 팀 장	•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규모보다는 실익 위주로 운영할 계획.
분 과 위 원 장	•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던 천안의 실패 사례를 바탕으로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접근해야할지 고민 필요.
미 디 어 팀 장	• 대부분의 미디어센터가 고가의 장비 위주로 구성. 아산은 장비보다는 VR, 스마트폰 등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비로 광범위한 체험과 활용,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 등을 구상 중에 있음.
분 과 위 원 장	• 구축의 성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구성된 콘텐츠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 주기 바람.
분 과 위 원 장	• (더 이상 의견 없음을 확인) • 다음은, 자치행정과 김은성 자치분권팀장님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건 설명 바람.
분 과 위 원 장	• 재정 및 업무 권한 확대는 지자체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이고, • 지방자치는 실질적으로 시민이 얼마만큼 참여하고 자기결정권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가 본질. 이를 위해서는 가장 낮은 읍면동 단위에서 시작 되어야 함. • 욕심을 내자면 송악과 같은 경우 직접 민주주의를 채택해도 상관 없음. 시와 자치위원회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원 개념의 활동을 하고 있는 의회와의 문제가 가장 큼.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운영을 위탁하고 조직의 구조가 자연스러워야 함. 지방자치의 폐해 중 하나가 의원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임. 매머드급 배방, 탕정이 아닌 작은 송악 지역을 지방자치와 연계한다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규모가 클 경우 이해관계, 편중된 정책이 나올 수 있음.
분 과 위 원 장	• 생활안전분과의 존재 이유가 지방자치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 생활자치를 이루기 위한 논의를 중간 연결고리가 되어야 할 것임. 기회가 된다면 주민자치회와 함께 논의 하였으면 함.
박 민 웅 위 원	• 주민자치력에 의해 가능한 위수탁 사무는 무엇?

발 언 자	내 용
자 치 분 권 팀 장	• 예를 들어, 공원 관리 업무를 주민자치회에 위탁해서 처리. 그 외 많은 다양한 사업이 있음.
채 훈 섭 위 원	• 충무교 확장 예정인데 곡교천, 산책로, 갈대숲에 대한 활용 계획이 있는지?
분 과 위 원 장	• 아산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 중 대표적인 것이 삽교천, 곡교천임. 실제 소유·사용이 쉽지 않음. 공론화 과정을 통해 곡교천 수변지역의 종합 계획을 전문기관과 범시민적으로 논의해야 할 필요성 이 있음.
간 사	• 곡교천 정비계획 진행 중. 다만, 국가하천인 관계로 풍수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구조물 등을 설치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현재, 기본적인 정비는 마무리 된 상태.
분 과 위 원 장	• 은행나무길에 대한 보호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음. 대단한 자원인만큼 면밀하게 명품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 해주셨으면 함.
분 과 위 원 장	• (더 이상 의견 없음을 확인) • 다음은, 내용이 유사한 정보통신과, 도시계획과 소관 공약 설명 바람.
정 보 기 획 팀 장	• (안전사각지대 CCTV 확대 설치 공약 설명)
채 훈 섭 위 원	• 강력사건은 많지 않죠?
분 과 위 원 장	• 그렇지 않다고 볼 수는 없음.
정 보 기 획 팀 장	• 범죄발생률이 급수로는 4급으로 많은 편임.
이 용 숙 위 원	• 천안아산역 광장 와이시티 쪽 CCTV, 가로등 설치 필요.
분 과 위 원 장	• 같은 안전 차원이니 가로등 건도 설명 후 함께 질문
가 로 등 팀 장	• (안전사각지대 보안등 확대 공약 설명)
채 훈 섭 위 원	• 시스템에 신청하면 다 설치해 주는지?
가 로 등 팀 장	• 가로등은 간선도로, 보안등은 이면도로 한전 전주에 설치.
박 민 웅 위 원	• 관제센터에서 관리가 가능한 것인지? 1,167대의 설치 대상지는 정해져 있는 것인지?
정 보 기 획 팀 장	•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내 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 관제가 가능하며, 신청 사항에 대하여 우선순위 검토를 통해 앞으로 설치 예정 대상지 수임.
분 과 위 원 장	• 아산시는 여성친화도시임. 하지만 지난번 롯데마트 사건을 살펴볼 때 후속조치가 미흡했다고 생각.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문제가 심각한데 전면적 점검이나 보안책에 대하여 제시된 부분이 없었음.
정 보 기 획 팀 장	• 공공시설물은 관리하지만 시설별 소관부서에서 별도로 관리.
분 과 위 원 장	• 안전책임의식을 갖고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경찰과의 유대적인 관계를 통해 사각지대 제로화 에 힘써야 함.

발 언 자	내 용
이 용 숙 위 원	• 서울시 안전벨이 우수정책으로 보이던데..
정 보 기 획 팀 장	• 이미 설치 완료, 점차적으로 확대 예정.
분 과 위 원 장	• 동선을 추적 가능한지?
정 보 기 획 팀 장	• 안심귀가서비스 시행 예정으로 관제센터에서 추적 가능
분 과 위 원 장	• 요청에 의한 예방이 아닌 발생한 부분에 대한 추적이 가능한지?
이 용 숙 위 원	• 시민들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많이 해줄 것.
김희경 주무관	• (위원회 운영방향 및 정책과제 개발 건 설명 보충)
분 과 위 원 장	•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음. 장시간 수고 많으셨음.